

중부세 완화론에 야권 균열? ... 이재명 "입장 조정이 정치"

민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언급...금투세 등 전향적 입장 김두관 "당 정체성 지켜야"...진보당 "부자감세 안돼"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을 띄우면서 거야(巨野) 연합 전선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중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이 큰 세입이 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부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노선과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의 조어)을 기치로 내건 이 전 대표는 중도·중산층 표심에 호소력이 큰 세입이 이슈까지 들고 나오면서 차기 당권을 넘어 사실상 대권 재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부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면서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중부세 완화론은 당내에 일부 파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군소 야당의 반발도 불러왔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부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여야 합의로 중부세 공제액을 12 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또 중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 전 대표가 진정으로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생각한다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소득재분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야권에서 이견이 분출한 이면에는 진영 내 헤게모니 경쟁, 나아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주도권 포석의 성격도 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재명 2기 체제'로 기울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야권의 주류로 자리 잡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야권의 전통적 주류 세력이 이에 맞서는 형국이 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적통'을 자처하는 김두관 후보는 봉하마을(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대로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와 '진명'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쫓아 이어온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당원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의 주요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고,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 역시 문재인 청와대 초대 정부수석 출신인 전병헌 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신임 대표는 지난 14일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당 정통성과 DNA를 박멸한 것도 모자라 푸틴 방식을 모방해 나치 시대, 히틀러 총통 시대를 흉내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 부결땐 상설 특검...민주 '플랜B' 거론

지도부 "검토 단계 아냐" 선긋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론을 중심으로 '독주' 비난이 거세지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

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인사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규칙을 고치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를 통해 거부권을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채상병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몫 추천위원은 제1당, 즉 야당인 민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도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지도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 재의결 성공전략에 당력을 집중할 상황"이라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은 일부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의결이 어려워질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이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15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지역기업 부진 등 총체적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제를 살리고,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해, 민주당의 근거지라는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대선때 전남에서 처음부터 이재명을

지지하며 앞장서 왔고, 대선 이후에도 당 인권위원장, 전남 기본사회위원장 맡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싸운 주철현이 전남도당을 맡을 최적의 임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섰다"면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중심 민주당 창출의 초석을 닦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 5대 공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체계적 선거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윤석열 정권을 철저히 견제하고 전남도당이 민주당 창출에 선봉 ▲전남도, 22개 시군 지방정부 및 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자치분권 실현 ▲당원 중심 도당 운영과 지구당 제도 부활로 당원주권시대 개막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 시범사업 발굴 및 2026년 지방선거 공통 공약 제시 등을 내걸었다.

주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이 되면 당원 중심의 민주당, 도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하고 노력하는 전남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1등 최고위원 위해 지지해달라"

민형배, 광주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통과한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이 15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경선 통과 후 본선에 진출하면 광주와 시민께 보고드릴 게 순서라고 생각했다"며 "꼭 1등 최고위원이 돼 광주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절체절명에 처한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정치 체계의 고장, 즉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 독재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국회 탄핵 청원에 이미 130만이 넘게 서명했다. 주권자 시민들은 그만큼 화가 나 있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불균형 상태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사람·자본·권력·예산 등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광주와 호남을 넘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간절함 바

람을 민주당에서 관찰시키고, 지역을 대표해 지역의 요청도 반드시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며 "광주에 지도부 최고위원 한 사람이 없다는 건 민주당으로서 유리할 게 없다. 광주는 민주당의 고향이고 중요한 근거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광주를 더 잘 챙겨가기 위해서라도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됐지만 민 의원과 함께 호남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이성운(전주) 의원과 해남 출신 최태호 안양시장 등의 지지세 결집에 대해서는 "지지체제이나 당직 말고 있는 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는 안 하겠지만 예비 경선이 끝나면 힘을 모으자고 얘기한 적 있어 이심전심으로 통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